

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이주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 전 주미얀마 대사)

동북아는 가해·피해의 역사가 있어 정치는 대립하고 경제는 상생하는 정경분리 속에서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중국과 그 유지를 원하는 미일이 갈등을 겪는 구조이다. 한중과 마찬가지로 빛을 보이는 일본의 우경화는 과거청산의 실패 등이 원인이며, 대국위상을 찾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 대외자세가 공세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국은 그런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며 창조외교를 펼쳐야 한다.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통일이라는 원대한 국가목표를 시야에 두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연결하는 서구형의 선린관계를 만들기 위해 국익의 공통분모를 찾고 추구해야 할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11.11.) 발표자료

목 차

1. 바람직한 대외정책의 정의에 관하여
2. 한일관계를 위해 진단할 사항에 관하여
 - 가. 동북아 정세
 - 나. 중국의 회귀(China is back!)와 미중관계
 - 다. 일본의 정세와 중국, 미국과의 관계
 - 라. 전후 일본이 안고 온 문제들의 진단
 - 마. 양국이 공유하는 한일관계 장애의 진단
3. 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 가. 전제로서의 국제관계 이해
 - 나. 일본의 대한정책
 - 다. 한국의 선택
4. 맺음말

1. 바람직한 대외정책의 정의에 관하여

- 국민의 사고방식, 국내정치, 사회풍토 등이 영향을 미치는 대외정책은 국제정세를 객관적,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야 건전하다고 볼 수 있음. 이것은 국력, 역학, 국제법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 분명히 정의된 합리적인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임.¹⁾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대외정책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국내 여론에 따라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는 여론의 판단이 관념에 흘러 큰 맥락에서 정의된 수명이 긴 국익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임. 외교에 능해 성공의 역사를 썼던 국가들의 대외정책에 특징이 있다고 함. 국민적 총의를 이루어 설정한 목표에 유연성과 일관성을 담아 길게 보며 포석하고 당장의 이익과 더 큰 잠재 이익을 모두 인식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보편성을 갖는다고 함.²⁾ 한국이 우경화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이것이 출발점이라야 함

2. 한일관계를 위해 진단할 사항에 관하여

가. 동북아 정세

- 역학적 관점에서 동북아는 패권적 대립의 현상이 되어가는 조짐이 있음. 중국이 현상타파주의로 기울면서 지역의 안정에 기여해온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미일 양국과 마찰을 빚기 때문임. 반면에 경제는 중국과 미일의 교류가 서로에게 유익하여 정치는 경합하고 경제는 상생하는 정경분리현상을 보이고 있음

[참고 1] 일본·중국의 갈등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³⁾

- 2014년 7~8월 일본인 1,000명, 중국인 1,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양국 응답자의 9할이 상대 국가에 반감을 느낀다고 답한 가운데 일본인들은 그 이유를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칙과 관행을 지키지 않고, 그 정부가 역사인식의 갈등을 선동하고 언동이 자기중심적이며, 영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순서로 답하였음. 중국인들은 일본이 영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하고, 역사인식이 틀렸으며, 정치가의 언동이 잘못되었고, 내셔널리즘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순서로 열거함.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다수 의견도 일본 측은 교섭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중국 측은 중국의 컨트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응답함. 양국관계의 장래는 모두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으나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은 모두 인정함
- 영유권과 역사인식을 두고 다투는 동북아는 국제관계를 시기심의 체제

가 지배하여 재앙이 끊이지 않던 19~20세기 전반의 유럽과 닮았음. 그 이유는 강대국들 간의 역학을 축으로한 지정학적 구도에서 한 나라의 합리적 선택은 다른 나라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각축양상에 연유함.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는 모두 내셔널리즘을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대립하는 동맹구조는 불신의 악순환을 낳았고, 모든 정부는 나름의 그럴듯한 논리로 상대 국가들에 대한 국민의 적개심을 고취시켰음

- 동북아는 가해 vs 피해의 역사 탓에 국민감정이 민감한 가운데 국내정치가 이것을 자극하는 형국임. 내치의 연장인 외교는 여론이 전부인 국내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반영되는 여론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제1차 세계대전 전야의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이성보다 감정의 지배를 받기 쉬운 애국심과 애국심들 간의 충돌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음

나. 중국의 회귀(China is back!)와 미중관계

- 근세 이전의 동아시아는 중국이 패권적 지위를 누린 느슨한 제국으로서의 역사가 길었음. 이에 따라 주변 국가들이 그 정변에 휘말려 변화에 적응이 늦으면 화를 입는 가운데 13세기부터는 위치적으로 신흥 세력의 배후에 해당되는 한반도의 타격은 컸음. 노쇠한 중국이 서양 세력에 밀린 19세기 중엽 이후 열강은 패권적 위상을 다졌음. 지중해로부터 서남아에 걸친 러시아의 남진을 막던 영국이 극동에서도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였고 이후 중국이 일본에 패해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을 잃자, 다시 그 지배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가 다투었고, 승자 일본이 동북아 석권을 노려 중국을 침략하자, 미국의 제재가 개입되었고 일본은 질 싸움을 벌임. 중국은 1949년 공산정권이 들어서며 자주독립을 찾았지만,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미국의 봉쇄로 고립되었다가 1972년 미중관계 해빙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함. 그리고 1978년 이래, 개혁개방으로 국력을 키웠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주도권에 도전하여 미일은 서로 견제하고 있음

**동북아는
가해 vs 피해의
역사 탓에 국민감정이
민감한 가운데
국내정치가 이것을
자극하는 형국**

- 리관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는 미중관계를 이렇게 말함. “어느 나라든 중국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그 뜻에 어긋나면 ‘13억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며 시장접근을 제한할 것임. 경제를 무기로 영향력을 넓히려는 중국은 국내시장과 해외투자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동남아, 일본, 한국을 그 경제의 틀로 끌어들이고, 지배적 위상을 세워 이들 국가와 기업이 중국의 위상을 존중하지 않으면 퇴출을 위협받

**중국이 경제발전을
이어나가려면 미국이
필요하며, 미국도
현재 누리고 있는
위상을 중국과
나눠 가져야...**

게 됨. 그러나 중국이 경제발전을 이어나가려면 미국이 필요하며 양국의 갈등은 ‘중국이 계속 미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범위 내’일 것임. 중국에게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실패한 독일과 일본, 미국과의 군비경쟁으로 파산한 소련이 타산지석임. 한 가지 우려는 중국의 신세대가 벌써 때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미국에 도전하는 경우임. 미중의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서로를 위한 길은 협력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존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피하기로 합의하는 것임.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는 없어 현재 누리고 있는 위상을 중국과 나눠 가져야함²⁴⁾

[참고 2] 역사에 비추어 본 동북아의 지정학에 관하여

- “중·동유럽에는 민족정체성(Ethnicity) 분포와 정치의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으며 1940년대의 대량살육은 주로 이런 지역에서 벌어졌음. 민족의 다양성, 구성 비율, 정치적 분화에서 이곳을 닮은 곳이 만주와 한반도임. 1904~1905년 러일전쟁으로 불안정을 경험하고, 엘베 강과 드니에프르 강 사이의 중·동유럽에 견줄만한 새로운 분쟁 지역이 아무르 강과 압록강 사이에 출현했음. 사상 최악의 폭력시대인 ‘50년 전쟁(1904~1953년)’의 시작은 일본이 처음으로 유럽(러시아)의 동양지배에 타격을 가한 해였고, 그 끝은 한국전쟁이 종식되면서 한반도가 분단된 해였음²⁵⁾”

[참고 3]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대한 중국의 갈망에 관하여

- “수 세기 동안 동아시아의 중심이었으나 반식민지로 전락하고 일본에 주역 자리를 내줬다가 되찾으려는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치욕스러웠던 역사의 연장으로 봄. 그렇다고 세계지배를 꿈꾸는 것은 아님. 자원과 시장에 대한 것을 빼면 관심은 아시아를 벗어나지 않고 모든 아시아 국가의 최대 교역상대라는 입장을 살려 미국은 중남미에 적용했던 면로주의를 중국이 동아시아에 적용하는 우월적 지위를 원함. 2013년 방미한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태평양은 두개의 대국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한 것도 그런 취지임.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주도 질서의 유지를 바라는 가운데 중국은 자기 위상이 부인되면 거부하고 그 속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참여할 것임. 미국은 중국의 야심을 수용하여 대만, 한반도 문제도 논의하여 개선된 지역 체제에 끌어들이어야함²⁶⁾”

다. 일본의 정세와 중국, 미국과의 관계

- 2012년 말 등장한 아베 신조 내각의 정책은 그에 앞선 정권들의 정책과 구별됨.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과감히 추진하고 아직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못 열 정도로 외교에 타격을 주는 우경화도 이어감. 반면,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임. 민주당 내각 당시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초래된 갈등을 해소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범태평양자유무역협정(TPP)교섭에 참가함. 그는 짧게는 다음 총선거 기한인 2016년, 길게는 다음 자민당 총재 임기 기한인 2018년까지 집권이 가능함. 경제가 다소나마 생기를 되찾고 실업이 줄어 지지율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야당이 약체이기 때문임. 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한 중과의 관계도 여론이 양국을 더 탓해 큰 부담은 아님

-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한 배경에는 내정상의 이유로 양국이 타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음. 일본의 역사인식이 부른 중국의 반감, 그것을 과도한 것으로 보는 일본의 반감, 일본의 식민지였으나 친일적인 대만을 둘러싼 대립의식, 중국경제는 성장하고 일본경제는 침체하여 불거진 경쟁의식, 역사적 유산 측면에서 섬나라 일본이 갖는 취약한 의식과 중국의 피해의식 등이 얹혀 국민정서와 지지기반(중국 군부와 일본우파)이 강경한 현실임

[참고 4]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에 관하여

- “2009년 일본이 센카쿠(다오위다오) 5개 도서 가운데 민간소유 3개를 국유화하여 분쟁이 고조된 가운데 2013년 중국이 선포한 ADIZ가 분쟁 지역 상공을 포함하고, 일본 ADIZ와 겹치면서 상시적인 전쟁유발요인(Casus Belli)이 발생했음. 중국이 선포한 것 자체는 무방하나, 일방적 방식과 공세적 내용이 문제임. 다른 나라들은 사전통보의무를 면제하는 단순 통과 민간 항공기까지 사전통보의무 대상에 포함시켰음. 중국 외교당국의 신중론을 군부의 강경론이 압도한 것이 그렇게 된 배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이어도 상공 ADIZ와 중복되어 밀월관계라는 인상이던 한중관계가 영향을 받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국가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을 경계하게 됨”⁷⁾
- 일본을 아시아 중시 정책의 발판으로 여기는 미국은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에 적극적인 것에 대해 안보부담을 공유하려는 노력으로 보고 환영함. 엔저가 기조인 아베노믹스를 문제 삼지 않는 태도도 그런 일본을 평가하는 분위기를 반영함. 일본도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여 미일동맹을 중시하며, 한일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한 미국의 도움도 기대함. 동시에 미국은 일본의 우경화가 지역에 긴장을 낳는 현실과 관련하여 수면 위아래에서 자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미국조야의 일각은 아베 총리가 대표하는 일본의 우파 세력이 추구하는 노선의 착지점이 “보다 자주적인 일본”일 수 있으며, 이는 미일 사이의 역학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관측함⁸⁾

**미국은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에 적극적인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

전전 구세력이

전후에도 집권하여

위안부를 만든

반인도적 행위를

단죄할 근거가

국내법체계에서

빠지고 영토문제가

내셔널리즘의

온상으로 자리 잡아...

라. 전후 일본이 안고 온 문제들의 진단

- 첫째, 역사인식과 청산의 문제임. 점령초기의 미국은 일본을 “동양의 스위스”로 만들기 위해 팽창정책에 책임있는 엘리트그룹을 공직에서 추방하여 구체제와의 절연을 주장한 진보세력이 부상함.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어 동북아에 두는 미국의 전략목표가 반공진영 강화로 바뀌고, 그 보루로서 일본의 재건이 우선되어 구질서가 살아남고 역사청산은 물 건너감.⁹⁾ 구세력은 자기들의 과거를 부정할리 없었기 때문임. 이에 따라 군위안부를 만든 반인도적 행위를 단죄할 근거가 국내법체계에서 빠지고 원폭피해가 상징하는 희생은 강조되며 “피해자 일본”이 부각되고, 영토문제가 내셔널리즘의 온상으로 자리 잡음. 즉, 역사인식과 청산에서 드러나는 일본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임
- 둘째, 영유권과 내셔널리즘의 문제임. 영유권을 두고 무심할 나라는 없겠지만, 오늘날 그것이 내셔널리즘의 온상이 된 선진국은 없고, 일본은 예외적임. 냉전 당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쿠릴열도)” 문제는 주를 이루었고, 안보정책과 연계된 전략적 고려는 내셔널리즘의 축을 이뤘음. 그때는 지나가듯 거론하는 수준이던 독도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근년의 일이며, 냉전이 끝나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이 퇴색하고 장기불황은 육구불만을 잉태하고 중국의 부상이 상대적 박탈감을 낳은 것이 얹히면서, 내셔널리즘의 불씨가 키워지는 입장이 경화됨
- 셋째, “잃어버린 십년”의 경제 문제임. 엔고와 함께 1985년 시작된 경제의 거품은 1989년 절정에 이르고 1990년에 꺼지며, 지난 20여 년간 명목성장이 거의 없어 비정규직이 30%를 넘고 청년실업이 크게 늘어남. 국내도 GDP의 2배를 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위도 상실함. 세계의 공업판도를 좌우하는 대기업군을 거느리고 첨단기술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중견기업이 버티는 일본은 국민저축으로 견디는 사정이 됨. 장기불황은 소비자보다 생산자, 내수보다 수출, 부의 순환보다 축적을 우선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신호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얽혀 응급처방에 매달리고 구조개혁은 미뤄짐.¹⁰⁾ 고이즈미 총리가 개혁에 나섰으나 생각이 다른 후계자들이 구태의연하여 용두사미가 됨. 2009년 복지를 내세워 집권한 민주당도 성장을 위한 개혁은 목표가 아니었고, 단명내각을 이어간 끝에 무력하게 무너짐. 그렇게 초래된 여론의 좌절감은 정치적 의도와 결부되어서 바깥세계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임
- 넷째, 우경화 문제임. 일본 정계는 “과거반성”, “호헌”을 내세우는 진보

좌파가 공산당과 사민당을 합쳐 양원의석의 10%에 못 미치고 민주당에서도 소수라서 우경화가 대세임. 우경화는 가해자로서의 역사를 잘못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출발은 인색함. 제국주의는 후발주자로서 구미를 따라 했을 뿐이고, 과오는 미국이라는 벽찬 상대와 맞섰던 무모함, 패자로 전락할 운명의 파시스트 국가들과 제휴한 점이 오산이라고 함.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희석되는 가운데 새로운 목표는 역사의 부채를 벗어던지고 국력에 걸맞은 대국위상을 회복하는 것임. 우경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금기를 차례로 깨는 것으로 나타남. 외침에 대비한다며 비상동원 체제를 갖추고 자위대를 해외에 내보내며 개헌이 가능하게 국민투표법을 제정함. 아베 총리 재등장 후에는 무기수출 금지를 완화하고, 2014~2019년 국방예산을 이전 5년보다 5% 늘리며 국가비밀보호법을 만들고, 2006년 이후 일본 총리로서 처음 야스쿠니를 참배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헌법해석을 바꿨음.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군위안부에 관한 고노담화를 “검증”한 것은 한국과 직접 관련된 조치임. 우경화 추진방식의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임. 지난 30년 동안 위헌이라고 했고, 여론도 이것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국무회의 결의로 대신하며 전후의 “평화국가” 역사를 청산했기 때문임. 일본과 “밀접한 관계”인 국가가 공격을 받아 위협이 일본에 미칠 것으로 보이면 행사한다는 것인데 일본이 판단한 “밀접한 관계”에는 동맹 미국과 함께 한국이 포함되고 있어서 의문의 여지가 없음. 미일 양국은 1997년 일본영토가 아닌 주변 지역에서 유사(有事)가 발생할 경우, 안보협력을 정한 지침을 2014년 말까지 대상지역을 전 세계로 넓히는 내용으로 바꿀 예정임. 이런 추세에 서방과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찬성이고 반대나 유보는 중국과 남북한 정도임. 재정이 어려워 국방비를 줄여야하는 미국이 일본의 자금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상 한국은 다른 선택이 없고, 적용하는 문제만 남게 됨. 이런저런 조건을 붙였지만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다른 나라들처럼 제약 없이 행동할 터라서 일본은 더 이상 어제의 일본일 수 없게 됨. 한국에게 북한은 생각하면 약이지만, 미일과 중국의 갈등을 생각하면 독이기 때문에 양날의 칼임. 미국의 이해관계가 한국과 다른 경우도 가능해서 선택이 어려울 수 있고, 대세가 된 일본의 우경화를 한국인들이 직시하지 못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음. 우경화가 계속되고 한국의 국민감정, 언론, 정치권의 강경기류로 외교당국의 운신이 제약되면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임

**우경화 추진방식의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인데, 개헌 대신에
국무회의 결의로
전후의 “평화국가”
역사를 청산...**

마. 양국이 공유하는 한일관계 장애의 진단

- 첫째, 시행착오의 문제임. 1965년 수교 이후의 한일관계는 한국에 새

한국은 일본이
 “새로운 차원”,
 “미래지향”,
 “성숙한” 관계라는
 언어에 담으려했던
 “과거를 넘어서자”는
 메시지를 못 읽고
 희망적 관측에
 기우는 착오를 범해...

정부가 등장한 초기에는 잘나가는 듯이 보이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패턴을 반복함. 한국이 지녔던 기대가 역사인식·청산 문제의 대두와 더불어 실망으로 바뀐 것이 이유였음(출범초기부터 문제가 불거진 박근혜 정부는 예외). 일본이 도의(道義)의 척도는 피하고 법리의 척도에 기운 편협도 한국을 자극함. 단, 일본이 표리가 부동했다거나 역사인식이 더 나빠졌다거나 정책과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일본은 그대로였는데 한국이 일본이 “새로운 차원”, “미래지향”, “성숙한” 관계라는 언어에 담으려했던 “이제 과거를 넘어서자”는 메시지를 제대로 못 읽고 희망적 관측에 기울었음

- 둘째, 첫째와 관련된 상호적 불신임. 한국은 일본이 드러내는 역사인식과 청산의 한계 때문에, 일본은 한국이 과거에 매달리며 남 탓만 하고 감정적이라고 불신함. 불신을 낳는 오해는 양국에 공통된 점으로 그 뿌리는 상대를 잘 모르는 현실에 있음. 비슷한 듯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이고 사고방식, 가치관의 차이가 엄연한데도 자기들 것을 상대에게 기대하여 실망하고 불신함
- 셋째, 정치논리의 속박임.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양국의 여론이 상대의 입장이나 태도에 반발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여기에 맞추려 하고 이것이 정부당국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장기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 넷째, 제3국·다자 요소임.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통일도 의식하는 한국은 한반도와 연결되고 북한을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과의 우호가 중요하여, 중국과 미일의 연결고리가 되어 지역의 공존공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면 영유권 문제도 있어 중국을 잠재위협으로 보는 일본은 한중관계에 민감함. 또한, 한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여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뤄지는 추세지만 일본이 원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는 한국이 일본의 과거청산이 미진하다고 반대함.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를 위해 공헌해왔다고 자부하는 일본은 러시아, 중국의 체제 문제를 들어 납득하지 않음

3. 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가. 전제로서의 국제관계 이해

- 첫째, 분쟁 역사에 대한 당사국들의 인식이 일치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제국주의의 가해자·피해자, 시오니즘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카슈미르와 인도·파키스탄, 냉전과 미국·소련, 베트남전쟁과 미국·베트남 간 인식의 괴리가 그 경우임

- 둘째, 역학관계가 지정학의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상대적 약자는 제한된 선택 중에서 생존과 번영의 지혜를 찾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강대국 틈에서 여러 번 명멸한 폴란드, 패권다툼에 치어 주권이 거듭 유린된 벨기에와 네덜란드, 시행착오 끝에 인접한 강대국의 안보수요를 받아들여 생존권을 지킨 핀란드가 그 사례임.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 역사도 시행착오의 연속이라서 대륙의 판세를 잘못 읽거나 명분에 매달려 비싼 대가를 치렀고,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시련을 겪었음. 현실을 직시하며 득실을 따지고 다층구조에서 유·무형으로 기능하는 역학을 깨닫고 택하는 것이 아닌, 아전인수로 계산하고 분수를 돌보지 않는 선택은 실패를 낳는다는 교훈임
- 셋째, 내셔널리즘이 관념과 정서로 형성되고 정치가 여기에 맞추어 질제를 상실하면 위기가 증폭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군국주의 일본, 나치즘 독일, 아랍주의 이집트, 주체사상 북한의 자기파괴성 내셔널리즘이 그 사례이고, 패전국 프랑스 입장에서 본 1870~1871년 프러시아와의 전쟁, 승패 구별 없이 모든 참전국이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제1차 세계대전이 그 산물임
- 넷째, 다원적 가치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역사는 자유, 개방, 진취, 관용을 실천한 국가가 국제관계도 공존공영으로 이끈다고 증언함. 민족, 문화, 종교, 가치의 차이를 우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존중하는 다원주의가 그 바탕임. 국제관계에서 “눈부신 성과”, “큰 이익”이 위험한 것은 화근으로 남을 박탈감 때문이라서 이해관계의 접점을 찾으려면 상대입장에서도 생각해야함. 프랑스에 이기고 알자스-로렌을 빼앗아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만든 프러시아의 과욕, 제1차 세계대전 종식 후의 베르사유 평화회의에서 패자 독일에게 가혹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부른 연합국의 과오는 타산지석임

**일본은 앞으로도
한일관계를 중시하여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계각층 교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전망**

나. 일본의 대한정책

- 일본 정부가 천명하는 정책과 취하는 자세에 비춰보면 한일관계에 두는 목표를 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 선린(善隣)관계를 쌓고, ② 폭넓은 우호친선을 위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히 하며, ③ 미국을 사이에 둔 안보협조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④ 세계와 지역 과제의 해결을 위해 공조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음. 일본은 앞

**한국이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희망적 관측이나
아전인수의 해석으로
기울면 오산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어...**

으로도 한일관계를 중시하여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계각층 교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 그러나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역사인식과 청산 등에 관한 태도는 종래와 다를 수 있음. 그동안 이런 사안에 관해 일본이 보인 모습은 본의였다기보다 필요에 따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며 조절한 결과였는데, 그 경향이 후퇴할 수 있음. 2012년 독도, 역사청산, 일본의 국가적 상징과 국제위상에 관한 한국요로의 언동이 초래한 여론조사결과가 그 추이를 보여줌(아래: 2012년 11월 일본 정부 발표)

	2011년	2012년	비고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	62.2%	39.2%	1999년 이래 최저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	35.3%	59%	"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		78.8%	1975년 이래 최고

여론조사는 일본의 내각부가 1975년부터 매년 실시

다. 한국의 선택

1) 기본방향

- 한국의 과제는 우경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임. 그동안에는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한국의 강경기조에 정면대응을 자제하는 경향이었던 일본이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이라서, 한국이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희망적 관측이나 아전인수의 해석으로 기울면 오산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좋고 싫고를 떠나 한국이 당연히 여겨왔던 일본이 아닌, 우경화 일본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대책 수립이 가능해짐. 그 대책도 한국이 무엇을 취하고 버릴지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 적응하면서 한국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일관계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선택임. 원칙에는 단호하되 출구도 시야에 두며 문제를 다룬다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은 긴밀한 연락 체제를 운영하며 함께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국내여론의 이해도 얻어 갈등이 관리 불능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함
- 양국이 긴 안목으로 더불어 지향할 한일관계의 목표는 서구형의 선린임. 사안별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면 시비를 가리되 공유하는 더 큰 이익이 손상되지 않게 냉정을 지키는 성숙한 관계임. 이를 위한 한국의 과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문제되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고, 일본의 과제는 보다 대국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임. 그렇게 해서 가치관의 공유라는 연결고리를 기초로 국민적 동의에 바탕을 두며,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에 근거하면서 지역과 세계의 공존공영

을 위한 질서를 함께 모색해야함

2) 주요 현안

- 한일관계의 마찰요인은 공유하는 역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차이임. 약육강식의 전국(戰國)시대를 거친 일본은 상대적으로 힘의 논리에 기울고, 외세에 시달린 한국은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점이 대조적임. 한국은 일본이 기억할 과거와 잊을 과거를 자의적으로 나눈다고 봄. 원폭 피해는 전자, 가해 역사는 후자임. 교육현장에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거론하면 반발하는 것도 불만임. 한국도 일본의 한계를 알아야 한일관계 관리가 가능해짐. 전쟁 전의 체제가 그대로 남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인정과 단죄를 피해 “집합적 죄”로 책임을 희석하고 원폭희생을 들어 피해자로 부각된 현실이 뜻하는 한계임.¹¹⁾ 그간의 경위가 보여주듯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역사문제를 극복해야함. 이를 위해 일본은 역사에 겸허해야 하고, 그런 태도를 한일관계에 반영해야 하며, 한국은 공유하는 역사를 인식하는 문제의 상대성에 대해 이해해야함. 갈등이 관계전체로 비화하지 않게, 균형과 냉정을 유지하기 위함임
-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은 러시아, 폴란드, 체코로 넘어간 영토가 침략의 역사와 상관없는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 일본이 그와 다른 배경을 살펴야 독도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음. 냉전 당시 일본이 한국을 중시한 것은 일본 안보를 위한 일선국가로서의 의미가 있었고, 냉전 후에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그래서 독도는 “북방영토” 문제가 불거지면 덩으로 스쳐가는 정도였는데, “북방영토”에 대한 열기가 시들고 독도가 이슈로 불거질 때마다 관심이 높아져 NHK가 “다케시마”라던 호칭을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로 바꿀 정도에 이름. 한국과 정면충돌할 의지는 아니지만, 영유권 주장의 실적은 계속 쌓이고 독도를 한국영토로 전제하는 영토외적(어업, 해저자원 등) 권리주장은 인정하지 않을 것임. 독도를 두고 일본이 드러내는 문제는 편협함. 일본영토가 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국제법상 일본 입장이 유리해진다고 보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며, 아베 내각 출범 후 이것은 더욱 현저해졌음. 일본이 현상변경을 피하지 못할 줄 알 터이지만, 한국의 대응도 때때로 합리성을 넘어서는 아쉬움이 있음.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한국입장을 분명히 알려야 하지만,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음. 문제가 비화되면 서로 물러서기 어려운 만큼, 첫 행동부터 출구전략을 시야에 두고 이뤄져야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간에 긴밀한 소통채널이 가동되어야함

**약육강식의
전국(戰國)시대를
거친 일본은
상대적으로 힘의
논리에 기울고,
외세에 시달린
한국은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점이 대조적**

**진취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이해를
함께하는 글로벌
이슈에 관해
보조를 맞추고,
지역협력의 발전을
위해 제휴하며,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협조해야**

- 국민이 서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선린의 토양임. 한국인과 일본인은 서로 그런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 장단점이 있는 그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음. 오해와 편견도 장애임. 그래서 정부 차원 못지않게 풀뿌리 차원의 교류가 중요함. 장애를 극복하고 우호친선을 쌓으려면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산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양국의 장래를 맡을 청소년의 교류와 교육현장에서 호의적 소개가 중요함. 특히 국민정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론형성계층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함. 상대의 어두운 모습이 아닌, 밝은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연장선상에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후 서로의 순수 및 대중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류는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흐름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함
- 양국이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도 공통의 경제 이익과 함께 전략적 연결고리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대국적으로 다뤄져야함. 이미 한미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만큼 한일이 비슷한 틀을 갖추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양대 해양 세력 모두와 안정적인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결과가 됨. 날로 심화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을 상쇄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참고 8] 바람직한 한일경제관계를 생각하기 위한 지역경제통합 추세에 관하여

- “일본은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로 동아시아에 제조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왔음.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형성된 제조 네트워크는 일본이 부품과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근간을 이루고 있음. 각국의 부품과 소재의 수입에서 일본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53.8%, 중국 43.2%, 동남아 23.4~70.5%, 대만 50.5% 등이며 이에 힘입어 동아시아의 역내무역은 전체의 60%로서 EU의 65%에 육박함. 일본은 그렇게 기업과 시장이 주도해 온 동아시아의 지역의 경제통합을 계속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¹²⁾
- 한국은 진취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세계의 안보 질서, 경제 질서, 글로벌 이슈에 관해 보조를 맞춰 협력하고 지역협력의 발전을 위해 제휴하며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협조해야함. 특히, 한국은 지역정세의 불안요인인 북한 문제 해결을 통일, 평화질서 정착, 공동의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 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일본과 더불어 모색해야함

[참고 9] 바람직한 지역협력을 위한 “동북아 공동의 집” 구상

- “유럽통합에는 지방적 특성이 있어 인류를 위한 보편적 메시지는 아님. 동북아처럼 이질적인 지역의 통합이라야 지구 차원의 의미를 가짐. 강대국의 패권다툼이 지역 장래를 좌우하는 데 맞서 대항할 유일한 방안은 “동북아 공동의 집”을 세우는 것이며, 긴장과 대결의 장인 한반도에 화해와 공생의 블록을 만들면 “공동의 집” 형성을 주도할 수 있음. 북한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수명 긴 평화공존은 불가능하여 다자협력의 틀이 필요하며 동북아 각국에 거주하는 수백만 한인도 이를 위한 자산임
-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몽골, 대만, 오키나와, 사할린, 하와이를 망라하는 손쉬운 환경보호에서 시작하여 경제협력을 거쳐 안보 분야로 발전시켜야 하며 정지작업으로 먼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함. ① 북한은 일본, 한국, 몽골과 함께 핵 무기 제조 포기를,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핵 무기의 불사용을 약속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② 일본과 북한이 납치 문제 등을 해결하여 수교하고, ③ 남북한이 경험의 진전과 함께 철도를 연결하며, ④ 휴전협정을 남북한, 미, 중의 4자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일본, 러시아가 지지하며, ⑤ 군사경계선을 대신할 잠정 국경선을 남북이 관리하면서 10년 정도에 걸쳐 국가연합으로 이행한 다음, 이것을 ⑥ 정상회담 정례화를 포함한 “공동의 집”골조로 이어가야함. 골조내용은 자연재해발생 시의 긴급원조 체제, 해양, 대기오염, 산성비, 황사, 지구온난화, 원전 등과 관련한 공동대책, 지역적 보편성을 갖는 문화권의 형성 등이며, 공동의 경제발전을 위해 우선 북한제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유무역지대 구상의 일환으로 양자FTA체결을 추진하면서 먼저 한일이 FTA를 맺어 돌파구를 마련하고, 최종목표로 정치안보 공동체를 추구해야함¹³⁾

4. 맺음말

- 서독은 속적 프랑스 등의 인접국 →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 공산권 중주국 소련 → 형제국가 동독과 차례로 신뢰를 쌓아 베를린장벽 붕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직·간접 당사국의 동의와 묵인으로 통일을 이뤘음.¹⁴⁾ 그런 정책의 창의성이 지금의 한국에 절실히 필요함. 특히 동독과의 관계를 전략적 사고로 섬세히 관리하여 결정적 순간에 주민과 지도자가 흡수통일을 받아들여 외세간섭의 여지를 없앤 지혜는 눈여겨 볼 만함. 초강대국이 아닌 나라가 스스로 역사를 열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누구도 예측 못한 혼미에서 그것을 기회로 살리려면 미리 준비해야 함. 분명히 지금의 한일관계는 어려우나 그것이 위기라면 기회로 바꾸는 것은 가능함. 그렇지 않으면 양국 모두 얻는 것 없이 잃기 때문임. 상대의 입장에서도 생각하여 국익의 공통분모를 찾으면 공존공영의 길이 열릴 것임. 역사는 그 중대한 고비에서 스스로 길을 열어가는

*서독은 주변국과
강대국의 신뢰를 쌓아
그들의 동의와 묵인으로
통일을 이뤘는데
그런 정책의 창의성이
한국에 절실히 필요*

나라만 인정¹⁵⁾ 하는 만큼, 통일이 원대한 국가목표인 한국은 앞장서 그 길로 이끌어야함

주석

- 1) 『日本の外交』, 이리에 아끼라(入江章, 전 하버드대 교수).
- 2) 『The Wealth & Poverty of Nations』, David Landes(전 하버드대 교수); 『大英帝國 衰亡史』,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 교토대 교수);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Joseph Nye(하버드대 교수).
- 3) NHK News Nine, 2014.9.9.
- 4) Lee Kwan Yew, Graham Allison & Robert Blackwill(미국 언론인).
- 5) 『The War of the World』, Niall Ferguson(하버드대 교수).
- 6) 『The Economist』, 2013.5.4, 2014.8.23.
- 7) 『The Economist』, 2013.12.30 등.
- 8) 『Int'l New York Times』, 2014.9.13, Norihoro Kato(와세다대 교수).
- 9) 『Colussus: The Rise & Fall of the American Empire』, Niall Ferguson(하버드대 교수)
- 10) 『The Economist』, 2009.1.31, 2010.1.2.
- 11) 『日本とドイツ: 二つの戦後思想』, 나카마사 마사키(中政正樹, 가나자와대 교수)
- 12) 『日本經濟の進路』, 사카키바라 에스케(榊原英資, 게이오대 교수·前 일본 재무성 재무관)
- 13) 『北東アジア共同の家』,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전 도쿄대 교수)
- 14) 『Der Spiegel』, 2009.3.2.
- 15) 『War Memoirs』, Charles de Gaulle.

❖ 저자 약력

■ 이주흠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후 외무부에 들어가 대통령 리더십비서관, 미얀마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거쳐 현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와 KBS객원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저작은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비매품), 『역사속의 리더십』(박영사), 『국가비전 Young Korea』(비매품)가 있음.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